

“ 공공의대 유감 ”

김 철 호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명예교수



공공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public, community일 것이고 공공이 한자어일 것이다. 즉 여러 사람을 위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넓은 의미에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의 좁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 공공의대가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한가?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고 기존의 의대는 모두 국민을 위해서 의료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공의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2. 저소득층이나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기관이나 취약지역(의사가 근무하고자 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고자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들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이 기존의 의학교육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국가가 시스템으로 해결하여야지 특수한 의대의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다.

3.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감염병 등의 관리를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한가?

의과대학은 감염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감염 예방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에서 일하는 직원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의사를 배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공공의대를 나온다고 그런 곳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뀐 발상이다. 감염병에 관심을 가진 의사를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자발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구를 위해서 특수분야(구급의학 등)를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같은 이유에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뿐이다. 다만 우리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군진 의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으나 유사시에는 보훈병원 등을 포함한 모든 병원을 동원하여야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이에 대한 계획과 훈련이 오히려 필요하지 국방의대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적인 논란을 내려놓더라도 정치권과 행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의사집단을 이익단체로 규정하여 이에 장기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다른 집단을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 의식이 작동되는 것은 본인 혼자 느끼기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 의료수준도 이에 어울리는 질적 향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의료 저수가에 의해서 고수입이 보장되는 미용성형으로 의사의 상당 부분이 집중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는 비슷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힘든 분야의 의학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 공공의대를 세워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를 우대하여 의료 정상화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HeartBit](#).